

검찰 “전씨 헬기사격 몰랐을 수 없다” 혐의 입증 자신

재판서 다들 쟁점은?

50만쪽 방대한 기록 검토

헬기사격 사실로 결론내고 기소

전씨측 “몰랐을” 발뺌 가능성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목적담은) 계엄군의 진압 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일 뿐이다.”(전두환 회고록 1권 초판본 482쪽)

전두환(88)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헬기사격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1988년 국회 청문회에서 헬기사격 목적담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헬기사격 사진을 제시한 고(故) 아놀드 피터스 목사에게는 ‘가면을 쓴 사관’이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기소된 전씨의 재판 쟁점은 전씨가 5·18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을 알았는지 여부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헬기사격 사실 여부를 놓고 검찰과 전씨 측이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헬기사격이 없었다면 전씨의 주장이 맞으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전씨가 헬기사격을 인지했으면서도 조 신부를 비난했다면 고의성이 있으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실제 헬기사격은 있었지만 전씨가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전씨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씨를 기소한 광주지검 또한 이 사건의 핵심을 헬기 사격 사실 여부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50만쪽에 이르는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헬기사격 목적자(47명) 및 참고인 진술, 전일빌딩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등 방대하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헬기 사격을 사실로 결론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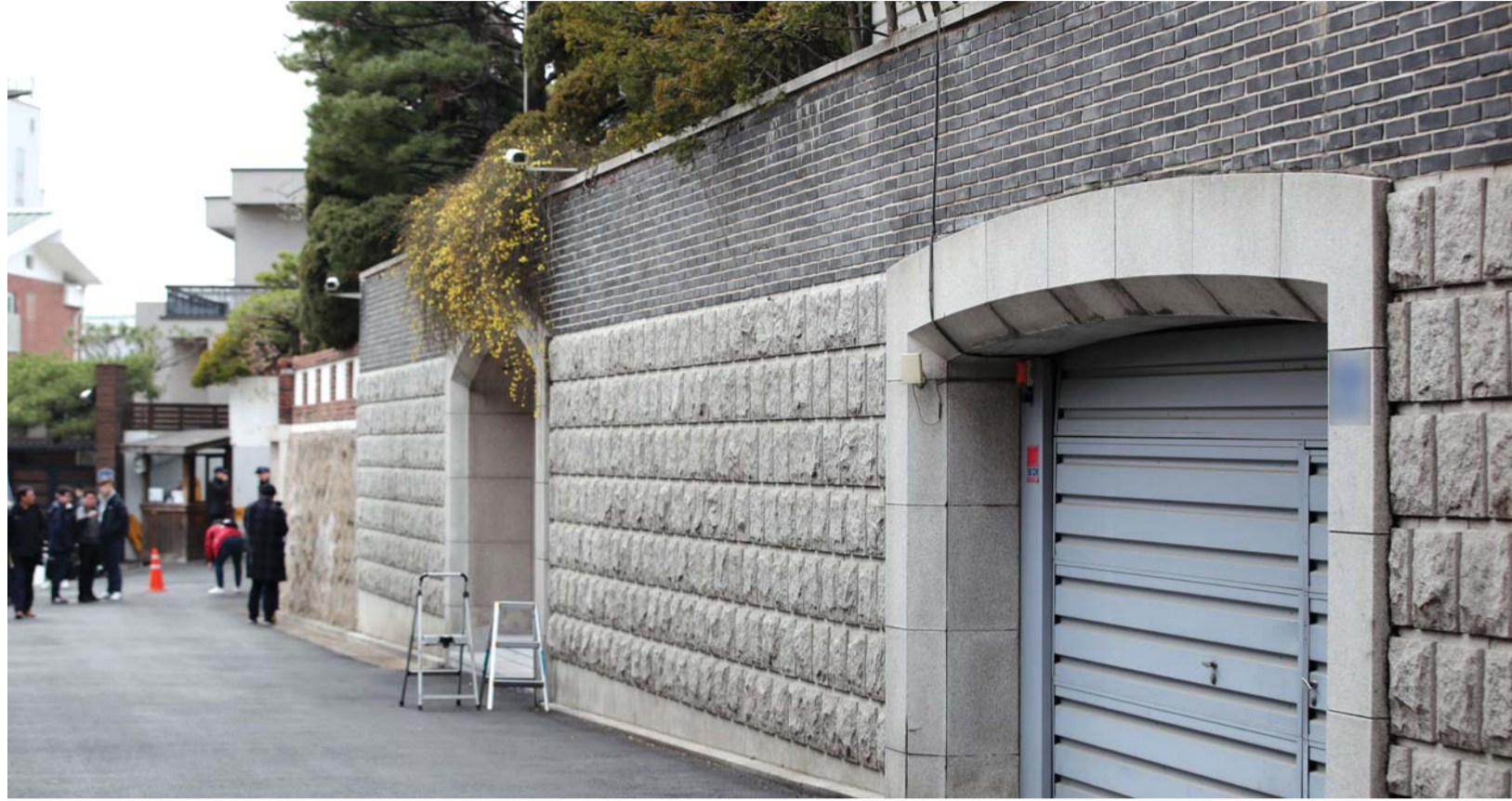
검찰은 결정적 증거 중 하나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는 광주일보 보도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기사(2018년 2월 22일자 1면)를 제시하기도 했다. 5·18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 국무부에 보고한 이 전문에는 ‘군중은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공격을 받을 거라는 경고를 받았고, 실제로 발표됐을 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다’ 내용이 기재돼 있다.

검찰은 5·18 때 보안사령관이었던 전씨가 헬기 사격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만한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고의로 조 신부를 비난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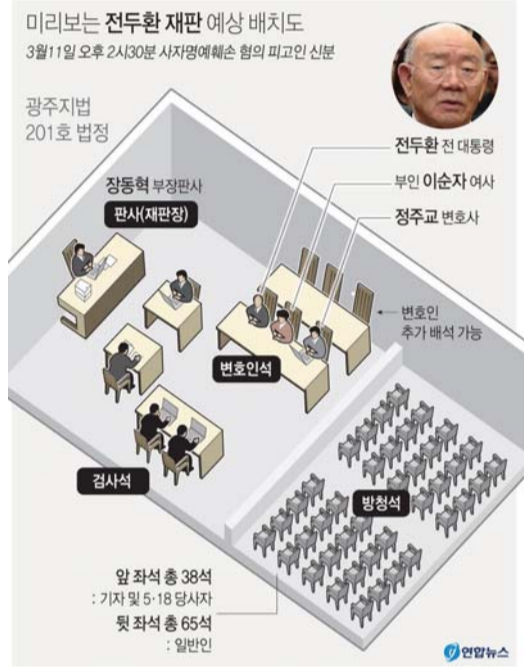
이에 대해 전씨 측은 ‘5·18 당시 계엄사가 아닌 보안사 소속으로 헬기사격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회고록 집필도 책임정리자인 민정기 전 비서관이 한 만큼 자신과는 상관 없는 일’이라는 논리를 맞서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헬기사격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면 재판이 전씨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김정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지부장)는 “전일빌딩에 헬기사격 탄흔이 150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상 남아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헬기사격은 사실로 인정될 것 같다”며 “전씨 측에서는 이를 예상하고 회고록을 집필할 때는 헬기사격에 대해서 몰랐고, 따라서 조 신부를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과수의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 감정결과 발표 시기는 2017년 1월 12일이고 회고록 출판시기는 같은해 4월이기 때문에 전씨가 헬기사격에 대해 몰랐을 수가 없다”며 “실례 몰랐다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사실 확인 없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강하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내란 수괴서 사자명예훼손 피의자로

23년전 재판과 달라진 점은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지 23년 만에 또다시 법정에서 선다. 전씨는 이번에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서 선 날은 1996년 3월 11일이다.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1979년 12·12 당시 신군부에 의해 지휘권을 강탈 당했던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은 전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 등 34명을 군형법상의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또 1994년 5월 5·18 피해자 322명도 전씨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12·12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5·18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2·12에 대해서는 군사반란사건으로 결론지었지만 과거사를 다시 들춰볼 경우 법적 논쟁이 계속돼 국력낭비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5·18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양민 학살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논리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 반란죄와 내란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됐고 1995년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내리자 검찰은 재수사에 들어갔다. 국회는 같은해 12월21일 제정한 5·18 특별법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임기 동안 12·12

와 5·18 사건 소추가 불가능했던 점을 들어 두 사건 공소시효를 늘리는 규정을 뒀다. 전씨와 노씨는 1996년 1월 23일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같은해 3월 11일 첫 공판때 수용자복을 입고 재판정에 들어서며 국민들에게 모습이 공개된다.

1996년 8월26일 1심 법원은 전씨에 대해 사형과 추징금 2259억5000만원, 노씨에 대해 징역 22년 6개월, 추징금 2838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같은해 12월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각각 감형 받았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구속 2년 만인 1997년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전씨가 본인 명의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사실상 거부해 비난이 일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5월 단체 등은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광주 법정에 서게 된 전씨는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가 있고 광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회고록과 관련해 형사 소송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조영대 신부 등은 지난 2017년 9월 출판 및 배포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은 지난해 9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오는 15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경찰 경호대 보호 받으며 승용차로 광주 도착...기동대 80명 법정 외곽 배치

교통 통제 않고 수갑도 안착취

법정 촬영 불허 언론 공개 안해

전두환(88) 전 대통령은 재판 당일인 11일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에 도착할 예정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11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지법으로 출발한다. 승용차에는 부인 이순자(80) 여사, 변호사가 동승할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명과 경찰 경호대는 전씨 승용차를 따라 광주로 향한다.

경호대는 앞서 지난 6일 서울에서 광주까지 동선을 점검하고, 광주지법을 미리 방문해 경호 계획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을 통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오후 1시 30분께 광주지법에 도착한다. 경찰은 전씨가 법원에 도착하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자신 출석과 고령을 이유로 수갑은 채우지 않을 방침이다.

광주지법은 경찰 기동대 80명을 법정과 외곽에 배치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으며 법정 보안관리 대원들도 곳곳에서 현장을 파악한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입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참관 인원은 총 103석(우선 배정 38석·추정 배정 65석)으로 방청권을 가진 사람만 입장할 수 있다. 지난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방청권 추첨식에서는 총 80명이 응모해 1.2대 1

의 경쟁률을 보였다.

법정 내부 촬영은 허가되지 않는다. 통상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첫 법정 출석이나 선고 때는 언론에 모습을 공개해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광주지법 담당 재판부(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전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점, 신변 보호 지정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한 해 촬영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오전 7시 30분께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 등은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 ‘전두환 대통령 광주재판 결사반대’ 집회를 연다. 200~300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평소 자택 경비 인력 외 별도의 경비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최단 2년6개월**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자금회수가능**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